

내 삶의 버팀목은 복지와 바로 나

지난 1999년 12월,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공통된 보도의 홍수 속에서 지내야만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던 씩씩한 흔적들로 남아 있다. 21세기를 희망과 평화와 번영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직장인들의 어깨는 그렇게 가벼운가를 돌이켜 되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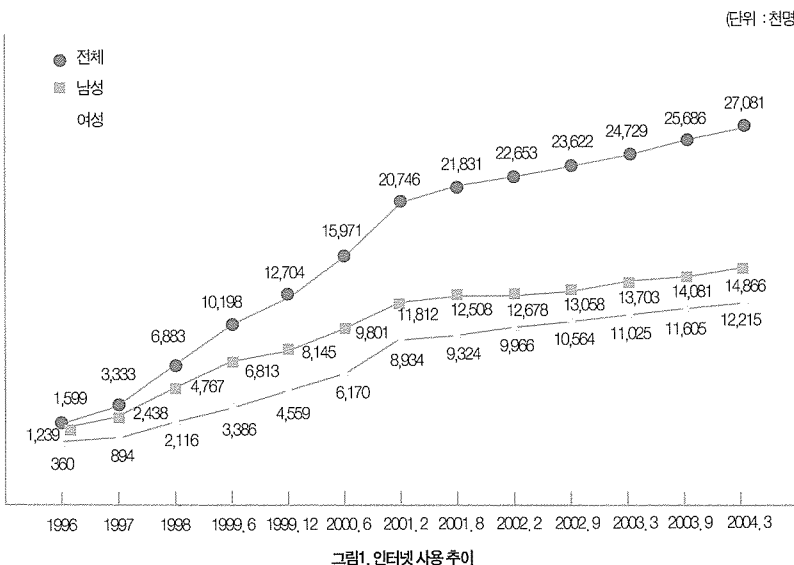
우리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소비를 통한 경제활동이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원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

들이 점점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10년 전 우리의 삶에서 핸드폰이나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염색하는 빈도는 어떤가? 하지만 수입은 그렇게 좁아질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음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우리 부모세대의 자녀양육의 평균 수와 우리 세대의 출산자녀의 수를 비교하면 답이 간단하게 도출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시장' 과 '가족' 에게 과도한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아이와 함께 동반자살한 한 어머

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은 이들은 드물 것이다. 이것을 '신빈곤(New poor/Working poor)' 이라 칭할 수 있다. 즉,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 또는 사회작용의 부조화와 같은 빈곤의 절대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신빈곤의 발현은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로 안정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생계를 위한 카드 사용으로 연유한 3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그리고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보장 제도의 작용으로 새로운 빈곤형태를 낳게 되었다고 하겠다.

세 아이와 어머니를 죽인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자신도 어찌 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한 바로 사회적 타살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적 고민들과 함께 열악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현주소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시도해 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큰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결혼은 본질적 삶의 형태를 변화시킬 만한 큰 사건이라고 하겠다. 결혼 후 신혼 부부는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도 잠시, 집을 사기 위한 전쟁에 투입된 전사와 같이 맞벌이에 내몰리게 된다. 아이가 크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떠밀려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것이다.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의 공간이자,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생산의 기능도 수행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문제를 개인과 시장에 내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국민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공공주택의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택 가격의 결정권을 주택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구조를 드러내는 좋은 자료일 것이다. 주택의 기본적인 재료 공간의 크기 등을 법과 제도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도 좋은 모범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결혼한 부부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게 된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잠으로 축복과 기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당장 입원비와 수술비, 출산준비물, 양육에 대한 고민들로 채워지는 것이 엄연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어 버린 지는 오래된 일 아닌가? 게다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비롯한 의료비와 비싼 아기용품 가격에 3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얼마의 수입을 보장받아야 가능하겠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17명에서 1.19명 정도로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통계수치를 통해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미 우리는 심각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2047년이면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2150년이 되면 놀랍게도 이 땅의 인구는 0명에 이르는 비참한 결과가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마당에 경제성장과 정치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육아, 가족, 이동수단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무엇이 급선무인지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대목이 세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다. 바로 교육 부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아마도 중학교까지라고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것도 2004년도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교육에 관련된 모든 예산과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아침마다 수업준비물에서부터 학교운영에 관련된 비용까지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무교육이라는 것인가? 한 마디로 외형적으로는 의무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의무교육이 아닌 눈가리고 이용되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교육의 비대화로 인한 부담감은 그 얼마나 막중한가? 4억원을 투자하면 누구나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들 한다. 서민들만 눈물나게 하는 이야기다.

네 번째로 의료 이야기를 빼고 지나갈 수가 없다. 건강보험료에



못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필자를 아프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무시한 채 현재와 같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21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존재조차 하기 힘들어 질 것으로 예견되어 있다. 물론 통계학적 예측이지만, 성장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갖추지 않고 성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win-win이 아닌 lose-lose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치권력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선거를 통한 선택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이다. 그 외의 대안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지 않았는가?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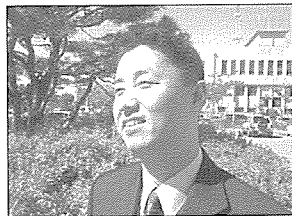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가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부실한 것도 사실이다. 45% 수준의 본인부담률과 실제 의료서비스에서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많아 병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이 빈곤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노인부양을 생각해 보자. 전쟁을 두 번이나 참가하고 경제개발의 뒀안길에서 묵묵히 국가정책을 삶의 의무로 받아들이며 일한 그들의 삶이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치매와 중풍이라는 나이 들에 따른 병들이 철저히 가족에게 짐지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이라도 할 경우 1달에 150-300만원이나 하는 입원비는 또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개인이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이라면 이제 국가가 그 짐을 덜어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간단하게 살펴 본 위의 다섯 가지 내용들이 아직도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은 경제성장과 반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현정부는 아직도 현실을 인식하지

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밀접한 내용들을 담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을 담은 공약들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정치인들을 선택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복지는 불안한 줄타기와 같은 현재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이자 방법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밝은 세상을 데려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우리의 실천과 결단이 남았을 뿐이다. ☺



+표경흠
사회사업가